

#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공약 채택 추진

###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63만 전주 시민과 함께 반드시 완수하겠다”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북지방변호사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민선 9기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우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은 단순한 공공기관 유치가 아니라 헌법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역사적 뿌리인 전주에서 완성하는 과정”이라며 “전북변호사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공약으로 채택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예비후보는 현재의 전주 이전은 헌법이 정한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과 발전’ 책무를 헌법 수호기관이 앞장서 증명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중심축인 전주에 헌법 수호 기관이 소재하는 것은 민초들의 숭고한 희생정신 위에 국가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필연적 과정이고, ‘법조 3성(김병로·최대교·김홍섭)’과 산인 한승헌 선생을 배출한 전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북지방변호사회의 제안을 수용해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을 민선 9기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북은 헌법재판소를 품은 역사적 정통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우 예비후보는 “헌재의 전주 이전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성운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동영 통일부장관, 김원웅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여하는 등 전주의 국회의원 3명이 함께 하고 있다”며 “전북지방변호사회, 전북도, 시민사회, 정치권과 함께 ‘일타’를 꾸려 입법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의 전주 이전을 위해 우 예비후보는 공감대를 형성할 협의체 구성과 당위성,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치밀한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가 동학의 열이 깃든 민초의 땅 전주로 오는 것은 헌법 권력을 진짜 주권자인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의미를 갖는다”며 “헌법재판소 전주 유치라는 과업을 63만 전주 시민과 함께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인구정책 ‘한눈에’

### 인구정책 길라잡이 책자 ‘사람 사는 전주’ 발간

전주시가 영유아부터 청년, 노인 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애주기별·분야별 인구정책을 총망라한 ‘인구정책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시는 시민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인구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26 인구정책 길라잡이 책자를 시정 민원실과 완산·덕진구청 민원실, 35개 동 주민센터 센터에 비치하고,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임신·출산 지원 △양육·교육 지원 △취업·일자 리·주거 지원 △노후 지원 △기타 지원 등 시가 추진하는 5개 분야 총 189개 사업이 수록됐다.

먼저 임신·출산 지원 분야에는 올해 신규사업인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비롯해,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총 31개 사업이 담겼다.

또한 양육·교육 지원 분야에는 신규사업인 우리아이 백일상·플상 무료대여 사업과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남성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외국인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사업을 비롯해 △부모급여 지원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총 69개 사업이 수록됐다.

청년 인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취업·일자리·주거 분야 사업에는 신규사업인 소규모 점포 참

업 지원사업과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청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을 비롯해, 기존 추진해온 △웨딩 in 전주' 공공예식장 운영 사업 △전주기업반 취업지원 사업 △청년취업 2000사업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극 △청년민원주택 '청춘★별채'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총 38개 사업이 안내됐다.

이와 함께 전주시민들의 노후생활을 든든하게 지지해 줄 노후 지원 분야 사업으로는 △노인실명 예방관리사업 △인생후반기 50+플랫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 등 총 28개 사업이 수록됐다.

이외에도 이 책자에서는 시민 안전과 밀접하고 생활 속에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전주시 평생학습관 시민강좌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전주시 정동보조기 보험 △전주시민 자정기 보험 등 총 21개의 기타지원 사업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시행

### 정부·지자체·대학 공동 지원으로 균형 잡힌 식단 제공

전주시는 올해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의 시비를 투입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왔으며, 올해는 전주대학교가 사업에 동참하면서 수혜 범위가 확대됐다.

사업 운영은 1학기 개강에 맞춰 대학별로 진행 중으로, 지난 4일 전북대

학교를 시작으로 전주기전대(17일)와 전주대(24일)가 배식을 시작했다. 운영 요일은 보통 평일(월~금)이며, 전주대학교의 경우 화~목요일에 식사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방학 기간을 제외한 오는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 재원은 학생이 1000원을 지불하면 정부와 지자체, 참여 대학이 나머지 식단가를 분담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쌀을 주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식사 지원은



전주시는 올해 고물가 시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2026년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물론, 지역 농가와와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식사 지원

을 넘어 청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실리적·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올림픽 유치 추진 상황 공유·전략 방향 논의

###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 지원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가져

전주시가 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2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올림픽 유치 범시민 지원위원회’ 지원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원조정위원회와 전주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원조정위원회와 전주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그간의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에 참여한 참석자들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제시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유치 단계별 실행전략과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홍보 및 시민 참여 확대 방안과 기관·단체 간 역할 분담,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IOC에 등 록된 국제스포츠 이벤트 컨설팅 전문 기업인 모노플레이인 정관호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전주 올림픽 유치의 당 위성과 의의, 기대효과’를 주제로 한 특강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올림픽 유치

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문화·관광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고, 올림픽 개최도 시로서 전주가 갖는 역할과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주가 보유한 전통문화 자산과 도시 경쟁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올림픽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유치 전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권희성 기자

#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청년활력수당 참여자 모집

전주시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과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에 참여할 청년들을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먼저 취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농업과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는 전주시 청년 1318명에게 생애 1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복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청년(18세~39세)으로, 도내에서 농업과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에

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3개월 이상 종사한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여야 한다.

또한 시는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 하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을 통해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감소로 취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을 돕고, 사회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미취업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이면서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전복에 거주하는 청년(18세~39세)으로, 시는 올해 879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채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